

여야, 공무원연금 개혁법·사자방 국조 ‘빅딜’하나

내일 정기국회 종료...‘비선실세’ 유탄에 입법 급제동

15일부터 임시국회 소집 합의...쟁점법안 처리할 듯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난 5일 정치현안 및 신적한 계류법안 처리를 위해 정기국회 폐회 이후인 오는 15일부터 내년 1월14일까지 임시국회를 소집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연금 개혁법, 김영란법, 북한인권법, 국회 선진화법 개정 등 주요 쟁점 법안들과 여당의 경제 활성화 법안, 야당의 민생법안 등도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여야가 오는 16, 17일 이틀간 본회의를 열고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현 정부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논란과 사자방(4대강, 자원외교, 방위산업) 비리 의혹 국정조사 문제 등을 놓고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여야는 10일부터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 간 연석회의를 통해 예산안 처리 후로 미뤄둔 정국 현안들을 논의할 예정이어서 양당 수뇌부의 치열한 수 싸움을 예고하고 있다.

협상 의제들이 공무원연금 개혁법이나 이른바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사업)비리’ 국정조사 등 그간 양측이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고 별다른 사안들이기 때문이다.

연일 확산하는 정윤희씨 등 ‘비선 실세’들의 국정개입 의혹도 어떤 식으로든 논의 주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커 협상 과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반영하듯, 양당은 연석회의의 시작

전부터 협상 테이블에 올릴 의제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지난달 여야 원내지도부가 국회 정상화를 합의하면서 합의문에 명시한 ‘사자방’ 국정조사와 공무원 연금 개혁, 정치개혁특위 구성으로 협상 의제를 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새정치연합 측에서는 ‘비선 실세’의 국정 개입 의혹이 국민적 이슈라는 점에서 논의 의제에 포함돼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일단, 새누리당이 연내 처리를 목표로 강하게 추진 중인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새정치연합이 요구하는 ‘사자방’ 국정조사를 놓고는 ‘빅딜(주고받기)’이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우세하다. 새누리당은 공무원 연금개혁안과 관련, 공무원 노조를 참여시키는 사회적 대화 기구를 연내에 발족시키고 시한을 못 박아 논의를 마친 뒤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사회적 대화 기구의 역할은 ‘논의기구’에 한정시키고 최종 결정권은 여야가 갖는 ‘투 트랙’ 방식이다.

그동안 사회적 합의 기구에서 논의해 개혁안을 만들자고 주장한 새정치연합의 주장과 상당 부분 근접했다는 평가다.

새누리당은 야당이 요구하는 ‘사자방’ 국정조사에 대해서도 일부 수용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김무성 대표는 지난 5일 당 공개회의에서 “국민적 의혹과 여러 국회 기능에서 해야 할 일은 어떤 성격도 없이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해 ‘사자방’ 국조의 수용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편, 새정치연합은 이번 기회에 개혁특위 구성도 함께 의제로 올린다는 입장이다. 개헌 논의의 불씨를 살려두고 사자방 국조 관철의 지렛대로 삼으려는 계산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정윤희·김종 차관 등 12명 野, 검찰에 고발·수사의뢰

새정치민주연합은 7일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파문과 관련, 정윤희씨와 청와대 이재만·정호성·안봉근 비서관, 김춘식 행정관 등 ‘비선실세’ 의혹을 거론한 인물,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등 모두 12명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했다.

당 ‘비선실세국정농단 진상조사단’ 단장인 박병계 의원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유진홍 전 문화부 장관 등 관련자들이 직접 경험한 내용을 진술한 부분은 증거 가치가 높다고 판단해 고발 조치했으며, 문건 등으로 나타난 부분은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은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책임행정의 원리를 붕괴시켜 권력을 사유화한 반헌법적 폭거”라며 “검찰의 수사가 균형을 잃고 유출 문제에만 집중될 가능성이 커 객관적인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새정치연합이 피고발인들에 대해 적용한 부분은 6가지로, ▲김기춘 비서실장 교체설 유포 ▲문화부 국·과장 인사 개입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위원장 사퇴 개입 등이다.

한편,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을 풀어 줄 열쇠 중 하나인 ‘비밀회동’의 실존 여부가 이번 주 안에 결론날 전망이다. 이 의혹을 담은 청와대 문건의 유출 사건 등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이번 주 내에 문건 속 비밀회동의 실제 규명 작업을 마무리할 방침인 것으로 이날 알려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박근혜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새누리당 지도부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특별 오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정치, 국회의원·선출직 공직자 평가

혁신실천위서... 호남지역 기득권 허물기 주목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회(혁신위)가 소속 국회의원을 포함한 선출직 공직자들에 대한 평가제(경주일보 10월29일자 4면) 도입에 나선다. 객관적인 평가위원회를 두고 국회의원들의 의정 활동과 선출직 공직자들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위원회의 입장이지만,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7일 새정치연합 혁신위 관계자에 따르면 “초반 혁신위 내부에서 논의됐던 선출직 공직자 평가제에 대한 논의가 가닥을 잡아가는 중”이라며 “외부에서 초빙된 전문 인사들을 주축으로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종합 평가하는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혁신위 내부의 공감대는 어느 정도 형성된 상황이지만 의정 활동 등을 계량화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 문제”라며 “이에 대한 논의가 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를 반영하듯, 당내에서는 혁신위의 ‘선출직 공직자 평가제’에 대해 현실적이지 않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외부 전문가들이 평가한다고 하더라도 의정활동이나 당내 활동에 대한 평가가 객관성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평가제가 궁극적으로 공천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당내 갈등을 유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공천이 곧 당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호남 지역의 경우, 선출직 공직자 평가제가 국회의원이나 단체장들의 기득권을 허물 수 있는 방안이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朴대통령 ‘정윤희 의혹’ 정면 돌파 의지

與지도부와 오찬...“짜라시 얘기에 나라 흔들, 부끄러운 일”

박근혜 대통령은 7일 ‘정윤희 국정개입’ 문건 유출 사태로 촉발된 비선실세 논란에 대해 “터무니없는 얘기가 짜라시어나 나오는 얘기”라고 단언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 등 지도부 및 당 소속 예산결산특위 위원들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며 이같이 말했다.

문건유출 이후 야당과 언론의 잇단 의혹제기로 비선실세 논란이 더욱 증폭되자 거듭 췌기를 박으며 정면 돌파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박 대통령은 나아가 “짜라시어나 나오는 그런 얘기에 나라 전체가 흔들린다는 것은 정말 대한민국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정윤희 문건”을 처음으로 공개한 세계일보 보도와 이후 언론을 통해 제기된 정씨와 비서관 3인방의 의혹 보도에 대해서도 “한 언론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보도한 후에 여러 곳에서 터무니없는 얘기를 계속 나오고 있다”고 언론 전반에 대해 강한 불신을 드러내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또 정윤희씨와 자신의 동생인 박지민 EGH장이 갈등을 빚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

라고 단호한 어조로 부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은 특히 정씨와 지만씨 부부를 모두 실명으로 언급, “정씨는 이미 오래전에 내 옆을 떠났고, 전혀 연락도 없이 끊긴 사람”이라며 “역대 정권의 친인척 관리를 보고 지만 부부는 청와대에 일선도 못하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래전에 결을 떠난 사람과 청와대에 일선도 못하는 사람이 갈등을 빚고 국정 전횡을 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그런 일은 없으니 새누리당에서 자신감을 가지라”고 덧붙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여야, 회의 불참 국회의원 수당 지급 않기로

앞으로 국회의원들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 수당을 못 받게 될 전망이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위원회가 각각 국회의원 세비 가운데 회의 참석수당을 참석 일수를 따져 지급하는 방안을 확정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회는 국회의원에 대해 ‘무회의 무세비, 불참세 무세비’ 원칙을 적용한 국회의원수당에

한법을 개정안을 확정, 8일 예정된 의원총회에 보고한다고 7일 밝혔다.

혁신위 소속 서용교 의원은 “현재는 위원회가 각각 국회의원 세비 가운데 회의 참석수당을 참석 일수를 따져 지급하는 방안을 확정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회는 국회의원에 대해 ‘무회의 무세비, 불참세 무세비’ 원칙을 적용한 국회의원수당에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2015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대학원 신입생 모집

대학원

일반전형

① 원서접수 : 2014. 12. 1(월) ~ 12. 9(화)
② 전형일

대학원	과정	모집학과	전형일시
일반대학원	박사	신학과(Ph.D.)	12.12(금)오전10:00~
		목회학과(D.Min.)	
	석사	신학과(Th.M.)	12.13(토)오후 3:00~
		신학연구학과(M.A.T.)	
신학대학원	신학과(M.Div.)	12.12(금)오전10:00~	
	교육대학원		교육학과(M.Ed.)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상담심리치료학과(M.A.)	12.13(토)오후 3:00~
		음악학과(M.A.)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음악학과(M.A.)	12.13(토)오후 3:00~
		유아교육학과(M.Ed.)	
국제대학원	석사	한국어교원학과(M.A.)	

학부

정시모집

①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열	모집학과	모집인원
인문	신 학 과	12
	국제한국어교원학과	3
사회	사회복지상담학과	2
사범	유아교육과	3
예능	음악학과	5
	실용음악학과	3

* 음악학과 전공 ▶ 피아노, 성악, 관·현악(타악), 클래식타악 포함, 오르간, 작곡, 교회음악
* 실용음악학과 전공 ▶ 드럼, 기타(포크기타, 일렉기타), 재즈피아노, 보컬, 베이스, 색소폰, 작곡, 미디어코딩, 싱어송라이터 등

② 원서접수 : 2014. 12. 19(금) ~24(수)
③ 전형일 : 2015. 1. 6(화)

500-71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로 36
입학문의 ▶ 대학원 062) 605-1115 학부 062)605-1114

참숯에 구워먹는 소고기전문점

소갈비살, 소안창살, 살치살

소고기 비싸게 먹을 필요 없습니다! 1인 만원이면 실컷 드실 수 있습니다

소갈비살 기본가격	기본2인분 2+2 = 20,000원	국내산돼지갈비2+2(700g) 20,000
	기본3인분 3+3 = 30,000원	국내산갈매기살2+2(480g) 20,000
	기본4인분 4+4 = 40,000원	왕갈비탕(6,000원) 볼팩 (6,000원)

초대박매출
신규창업,업종전환 시 성공을 보장합니다
오른점 일평균 2백만~4백만원 이상 대박!!

광주, 호남지역 체인점모집
민물수 있는 우리 지역(광주)의 본사 프랜차이즈입니다.

262-0049/010-3803-2612
오치점(266-0045) · 두암점(251-8216)
교대점(526-6617) · 일곡점(573-5204)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불경기!! 절대 싼 고기라서 싸게 파는 게 아닙니다.
바리다매!! 손님은 싸게 드시고 업주는 작은마진이지만 많이 팔기 때문에 착한소장수는 불경기형 맞춤브랜드로 손님들께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있습니다.